

업 무 보 고

연금개혁특별위원회

# 업 무 보 고

2026. 3. 18.

기 획 예 산 처

# 순서

I .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.....	1
II . 국민연금 등 장기재정전망 .....	2
III . 연금개혁 추진현황 .....	3

## I .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

- (다층 연금체계) 기초·국민연금으로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퇴직·개인·주택연금은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한 보완적 역할 수행

### < 우리나라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>

구분	자영업자	근로소득자	공무원 등
3층	개인연금(764.2만명, ※'24년말) + 주택연금(15.0만명, ※'25.12월)		
2층		퇴직연금 (735.4만 명) ※'24년말	지역연금 (179.7만명) ※ '24년말
1층	국민연금 (2,161만명) ※'25.11월		*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 군인연금
0층	기초연금 (701만명) ※'25.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('24년 생계급여 160.3만명, 노인 75.5만명)		

- (기초) 노후 기본적 생활보장 및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'14년 도입, 노인 70%(701만명, '25.12월)에게 최대 349,700원 지급
- (국민) '88년 도입,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지역연금 가입자 등을 제외한 전 국민이 의무가입(만 18~59세)
  - \* '25년 가입자 2,161만명(18~59세 인구 2,956만명 중 73%), 수급자 763만명, 月 평균 수급액 68.4만원
- (퇴직) 근로자가 월 급여의 일정 비율(사업주가 8.33% 전액 부담)을 매달 적립, 55세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('05~)
  - \* 44.2만개 사업장(도입률 26.5%), 735.4만명 근로자 가입('24년, 가입률 53.3%)
- (개인) 노후 및 장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('94~)
  - \* 적립금 180.1조원(세제비적격 포함 전체 389조원, '24년말), 계약당 年 285만원 수급
- (주택) 가입자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대출 형식으로 수령('07~), 주택금융공사가 지급 보증
  - \* '25.12월 기준 15.0만명 가입, 月 평균 지급금 127만원

## Ⅱ. 국민연금 등 장기재정전망

- (전망배경)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라 장기재정전망을 5년마다 발표하며, 2025~2065년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작년 국회 제출('25.9)
  - 현행 제도·정책이 변경 없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인구·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래 재정위험 및 지속가능성을 진단
- (국민연금) 저출생·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가입자 수는 감소, 수급자 수는 급증하여 수지 악화 전망
  - '48년 적자전환, '64년 기금고갈, 기금고갈 이후 '65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△5.1% 수준
  - ①기금수익률 제고(+1%p), ②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등을 재정안정화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
- ※ (기초연금)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\*에도 하위 70% 지급, 기준 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액 상향\*\* 등에 따라 지출소요 증가 예상
  - \* 65세 이상 인구 비중(% 통계청 장래인구추계) : ('25) 20.3 ('30) 25.3 ('50) 40.1 ('72) 47.7
  - \*\* 기준중위소득 대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(% KDI, '25):('15) 56 ('21) 87 ('25) 93 ('29) 104
- (시사점) 인구·성장률 제고, 지출 효율화 및 수입 확대, 연금개혁 등 다양한 정책 대응에 따라 장기전망 결과가 변화 가능
  -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 필요

⇒ 인구구조·재정여건 변화 등으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등 정책적 대응 필요

### Ⅲ. 연금개혁 추진현황

① '26년 예산에 제3차 연금개혁에서 추진된 과제를 충실히 반영하는 등 연금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지원

- ① (출산 크레딧) 기존 둘째부터 12개월 → '26년 첫째부터 12개월로 확대
- ② (군 크레딧) 기존 6개월 → '26년 12개월로 확대, '27년부터는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
- ③ (보험료 지원) 기존 납부재개자 → '26년 월소득 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

② 복지부·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정과제 및 노사정 공동선언에 반영된 주요 연금개혁 과제 지속 추진

#### < 국정과제 주요내용 >

- ▶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('27년 예정), 군 크레딧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('26년 12개월 → '27년 복무기간 전체)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(납부재개자 → 월 80만원 미만 저소득자, '26년), 기초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
- ▶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, 중퇴기금 가입대상 사업장·종사자 확대,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검토(노사 의견 수렴 및 수급권 보장 전제)

※ (노사정 공동선언 2.6)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(중퇴기금 300인 이하 사업장 단계적 확대), 사외적립 의무화 합의

③ 국민·기초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 적극 발굴해서 추진

⇒ 관계부처와 함께 연금개혁 과제를 충실히 지원하고, 국회 연금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